

‘학교비정규직 총파업’…광주시교육청 대체급식·단축수업

“25일 총파업,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 참여 예상”

“시교육청, 학교급식·초등·유아돌봄 공백 대책마련”

‘학교 급식종사자·방과 후 돌봄교사’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광주시교육청이 대체급식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에 광

주지역도 상당수 노조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급식을 비롯해 방과후 돌봄, 유아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일선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발송했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5개 학교에 43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파업 실제 참가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진행됐던 총파업에는 노조원의 11%인 48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급식이 지급된 학교는 43개교이다.

또 “쟁의활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외부인력, 관계없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대체인력은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가장 큰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급식은 빵과 우유·도시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급식 종사자가 대거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과 유아돌봄은 종사자 50%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통합 운영하고 전체 공백이 예상될 경우 총파업 당일 미운영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다르게 이번 총파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참가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학교급식 등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학생·학부모 피해 최소화

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실질임금 삭감을 시도하는 등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파업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차별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강요·면박에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적 법관들 여전

광주변호사회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우수 법관 7명, 하위 법관 5명 선정
 “공정성 ↓, 방어권 행사 제한 초래”

광주 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 결과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2022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송희호)의 심의·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변호사 274명이 법관 394명(판의 법관 포함)의 공정성, 품위·진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5.23으로 집계됐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떨어지고 방어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묵살,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 친분 과시, 심리 과정의 무관심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모욕적인 지적을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재판 지연과 비효율적 재판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장 접수 뒤 2년이 지나 첫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나 사건이 정체돼 1년 이상 기일을 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준비 서면을 읽어보지 않고 재판에 참여한 것처럼 사건의 쟁점 사항을 모르거나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아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정 결과가 7개월 넘게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명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충실도를 객관·주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수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변호사시험 2회), 광주지법 조현호(연수원 29기, 해남지원)·박상현(32기)·노재호(33기)·전일호(33기)·김정민(41기)·구현정(변시 1회, 장흥지원) 판사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노재호 판사는 3년 연속, 박상현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우수 법관에게 ‘우수 법관 증서’를 전하고, 변호사 5명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게 평가 결과 내용을 개별 전달한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 화재 대피 훈련

광주 북구청 직원과 민원인들이 21일 광주 북구청광장에서 열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불시 화재 발생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철새 3배 증가’ 전남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12월15일까지 민·관 합동 농장 방역수칙 이행 집중점검

전남도가 21일부터 12월15일까지 4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민·관 합동으로 농장 방역수칙 집중 이행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가 발생하고, 지난해 대비 겨울철새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16일 현재 전남지역에선 영암호, 순천만, 고천암호, 강진만 등 35개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 73종 20만6000

마리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6만2000마리)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고병원성 AI 검출 주요 축종인 오리와 조류는 16만6000마리로 지난해(3만4000마리)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지역 산란계·종오리농장 등 산란가금 사육농장 144곳에 대해 12월9일까지 일제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저주담양군연합사업단